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 - 군수가 밝힌 지역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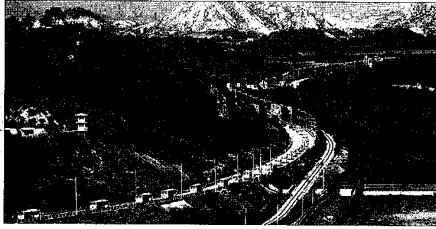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대체산업 지원

고성군

고성군의 5대 현안사업은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피해에 따른 대체산업(시설) 지원을 비롯해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연장 건설,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추진, 동서평화고속도로 인제-고성 연결, 국도 46호선 인제 용대리-거진을 대대리 도로선형 개량사업 등이 꼽힌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2003년 2월 시작, 2008년 7월 중단돼 8여년 동안 매년 고성을 찾는 관광객 210만여명이 줄고 휴·폐업한 상가만 400여 곳에 이르러 경제적 피해만 3,000억여원에 달해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고성군은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지역의 경제·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체산업(시설) 지원 건의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군은 대체산업(시설)으로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허가와 내국인 전용 면세점 설치, 특별교부세 지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고성군 선



◇금강산 육로관광에 나선 관광객을 대운 관광버스가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동해북부선·동서평화고속도로 비롯 국도 46호선 도로선형 등 접경나후지역 교통망 확충

정을 통해 평화통일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만이라도 조기 확정을 건의했다.

도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 및 연안군 사령부 등과 협의의 선점할 사항이라는 요식적인 답변뿐이며 다른 건의사항에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 중단 장기화와 분단 특수성으로 인해 고성지역이 각종 국가 발전정

책에서 소외돼 있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 완공과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을 연결하고 고성만 단절시키고 있다.

소외된 접경나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을 연장 건설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통일 대비 남북 연결 핵심 교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군은 또 동해북부선 철도 미연결 구간인 강릉-고성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추진으

로 국제철도(TSR) 수송체계를 구축해 '남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현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서평화고속도로 인제-고성 연결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과 여객량 감소,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된 고성군의 경제회생을 위해 동서를 이어주는 고속교통망 개설이 절실하다.

또 국도 46호선 인제 용대리-고성 대대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은 인제-고성 구간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골짜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며 주요 도시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윤승근 고성군수는 "금강산 관광으로 지역경제가 다소 위안을 받았으나 이마저 중단됐다"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소외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에 따른 대체산업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고성=이경웅기자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 - 군수가 밝힌 지역현안 /

올림픽 지원도로·급수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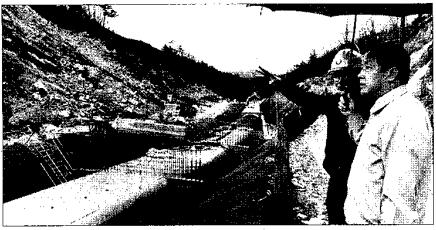
평창군

평창군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시·군 현안 토론회에서 국도 31호선(방림-장평)·국도 42호선(안흥-방림)·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평창-제천)의 조기 착공,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총 사업비 변경 등을 건의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지만 평창군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SOC 기반 시설과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다.

국도 31호선 방림면 방림리-용평면 장평리 19.6km 구간은 강원 남부권과 충청, 경상, 대전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이룰 수 있어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될 기반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대회 이전에 조기 완공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경상권은 물론 남해안권 관광객의 경기장 이동노선으로 활용 가능하다.



◇평창군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승인예산보다 초과 예산이 필요한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사진은 심재국 평창군수의 현지확인 모습.

31·42호·국지도 82호 완공 되면 경기장 접근·용이 안정적인 급수 위한 사업 예산 120억원 확보 필요

총 사업비는 80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군은 국도 31호선 방림-장평 구간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국도 42호선 황성 안흥-평창 방림 간 24.5km 구간 역시 수도

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포장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총 1,997억원의 사업비 중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다.

또 군은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제천-평창) 확장도 요청했다. 이 도로는 경기, 충북, 강원 등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지만 노폭이 좁고 급

경사·급커브 구간이어서 사고가 잦다. 강원도 구간은 26.3km이며 총 사업비로 1,55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들어설 대관령면 일원에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보다 120억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2017년 10월 말까지 총 저수량 195만톤의 식수전용저수지와 1일 7,000톤 처리 규모의 정수장, 도수 및 송·배수관로 16.9km가 시설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림픽 지구와 대관령면 급수구역 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513억여원인 총 사업비가 634억여원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회위원의 국비 확보 노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올림픽 불 조성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평창=김영석기자 kim71125@

빙상경기장 진입로 일부 조기 완공

〔강릉〕올림픽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 공사와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 중 소금강온천-방내IC 구간이 조기 마무리된다.

강릉시는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중 경포사거리 준정교-안국주유소 구간 길이 2.57km에 대해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강릉중앙교회-세무서-안국주유소 구간 길이 1.47km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9월 말까지

소금강온천~방내IC 구간 7월 개통 등 공기 앞당겨

해변관광 불편 해소·올림픽 성공 개최에 총력 나서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신설 구간인 준정교-운동장 일구교차로(중앙교회) 간 길이 1.1km 양복 2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칠기로 했다.

시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

하고 12월에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올림픽 테스트이벤트의 성공 개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도 6호선 두능-연곡(연곡면 삼산리-연곡면 방내리) 간 길이 12.66km에 대한 도로 개

정역기지사

설공사와 관련, 동계올림픽 이전에 모든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209억원, 내년에 83억원을 투입해 마무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체 구간 가운데 소금강온천-방내IC 구간은 오는 7월 여름해빙 개장 이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진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상공인 간담회

〔춘천〕춘천상공회의소(회장:김대호;사진)는 25일 낮 12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춘천상회의 의원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춘천상의는 이 자리에서



김진태 국회의원 당선자를 축하하고 춘천시의 발전과제와 향토기업의 차별화된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건설 등 교통·관광 인프라 확대와 첨단IT 데이터센터 유치 등에 따른 춘천 발전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협의한다. 남궁현기자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 - 군수가 밝힌 지역현안 /

국도 확·포장 교통량 급증 대처

〈6호·42호선〉

횡성군

횡성군은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시·군 현안 토론회에서 교통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도 6호선 및 42호선의 4차선 확·포장을 당선자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이들 국도 노선은 상시 정체로 인해 수도권 접근 교통망으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가철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지정체가 심화되면서 우회하는 차량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국도 6호선의 경우 총연장 274.2km 중 유일한 2차선 구간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분산·우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4차선 조기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횡성 서원면 유현리와 공근면 신촌리를 잇는 국도 6호선의 확·포장은 강원·경기



◇지난 3월7일 열린 '강원·경기 상생발전 토론회'에서 한규호 횡성군수가 국도 6호선 확·포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인근 노선 상습 정체·사고 위험 높아 최우선 해결 요구 원주~강릉 고속전철 횡성역 연장 등 교통망 확충 시급

상생협력토론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횡성읍 입석리와 원주시 태장동을 잇는 국도 5호선의 6차선 확·포장도 현안으로 내놴다. 이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만7,896대(2012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원주권 생활권 교통망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의 4차선 구조로 상습적인 정체구간이 발생하고

있어 물류비용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공동 추진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서원주IC에서 횡성군 서원면으로 연결되는 접근성도 해결 과제다. 유일한 도로인 농어촌도로 210호선은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민끔 4차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군은 도로 확·포장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원주시와 시행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철도망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 성남, 여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민کم 원주-강릉 고속전철이 한 축인 횡성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횡성의 원주공항 활성화와 관광·휴양산업 발전, 수도권-강원 중부내륙-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 축의 핵심 교통망을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교통망 확충은 횡성의 수도권 시대와 기업도시로의 발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구 10만 프로젝트의 핵심인 민کم,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성=허남윤기자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 -시장이 밝힌 지역 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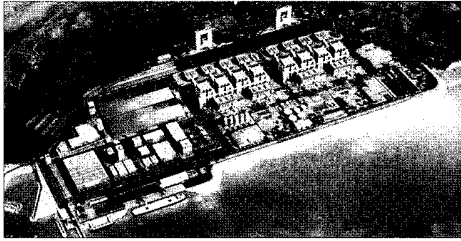
원전 백지화 관철·신재생에너지 확대

삼척시

삼척시는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시·군 현안 토론회에서 삼척원전 건설을 백지화 하는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5개 지역 현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양호 시장은 “지역 최고 이슈가 원전 백지화다.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주민투표로 주민 85%가 원전을 반대한다는 민의를 확인했고, 원전문제는 향후 50년, 100년을 먹고 살 강원도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모두 힘을 모아 백지화를 이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당선자 또한 “원전 문제는 삼척-동해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청정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당선자가 각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에 원전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삼척그린파워 3·4호기 증설이 요구되고 있는 남부발전 종합발전단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 삼척원전 배제 협조 요청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착공·변전소 확대 강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한 뒤 주민투표 결과 85%의 원전유지 반대 의견이 도출됐고,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민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서 삼척원전 건설사업이 배제되거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

다. 또 김 시장은 동해안 삼척과 서해안 평택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현재 평택-제천 구간만 건설돼 있으며, 잔여 구간인 제천-삼척 구간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는 포함됐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

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변전소 수용용량(계통연계)이 부족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변전소가 삼척시 도계읍 등 전국 13개소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변전소 수용용량 조기 확대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밖에 원덕읍이 국책사업(LNG생산기지, 화력발전소) 공정이 90%를 넘어서면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삼척그린파워 3·4호기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 및 재 구간이 산악도로로 인한 경사도와 연속된 급커브로 인해 차량 추돌, 추락 등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대단위 고령자 채소 반출과 석회석 광물 운송 등 차량 통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구조개선(터널화)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삼척=황만진기자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 -군수가 밝힌 지역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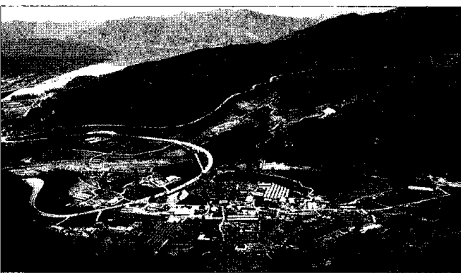
도로확장·소방서 건립·하수도 정비

화천군

화천군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지역 핵심 현안사업으로 춘천-화천을 잇는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과 국도 5호선 화천-상서 우회도로 건설, 지방도 407호선 화천대교 4차선 확장, 소방서 건립, 사내면 명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동안 도시장·군수협의회와 화천군 및 의회, 번영회 등 사회단체 등은 춘천-화천 간 국도 5호선(19.68km)의 경우 수도권 접근도로망 확충 및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관광객 증가, 심한 골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4차 확장 및 조기 착공할 것을 잇따라 중앙부처에 촉구했다.

군은 2003년부터 정부에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2006년 기획예산처로부터 사업타당성을 인정 받았으나 SOC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까지 지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국도5호선의 급커브길.

관광객 증가·안전사고 위험성 조기 착공 촉구 조속 해결 5가지 사업 꼽아...국비 확보가 관건

지부진한 상태다.

또 상서면 노동리-산양리 구간(4.9km)은 산양취락지구로 교통체증과 군용차량의 저속운행에 따른 교통체증 및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국도 5호선 화천-상서간 우회도로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어 화천 관문인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화천대교(393m)는

1985년 2차선 군작전도로로 건설된 이후 교량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교량 폭이 좁아 출퇴근 시간대나 산천어축제 기간 심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4차선으로 교량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천을 시가지 고층아파트 등 대형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27m짜리 굴절사

다리 등 보유장비 부족으로 화재 및 재난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인 만큼 하루빨리 소방서를 건립해야 한다.

현재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소방서 신축(2017-2018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기반조성사업비 15억원의 국비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천군은 군부대 및 취락밀집지역의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하루 23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내면 명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17-2019)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30여억원의 확보가 관건이다.

최문순 군수는 “수도권 접근성 확보 및 낙후된 접경지역의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발전의 근간인 국가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반드시 관철되고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했다. 화천=정래석기자



제7회 건설인하프마라톤 대회 성료

상암별 뒤덮은 '화합의 함성'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다

범건설인의 희망찬 함성이 서울 상암동 광장에 울려 퍼졌다. '범건설인의 봄의 축제' 제7회 건설경제 하프마라톤 대회는 모두 1만여 명의 건설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일반인 마라톤 애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 관련기사 14-15면 안윤수기자 ays7@

건협 강원도회 정기총회... 적정공사비 확보 등 총력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역건설업계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과 적정공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시 베이스호텔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강원도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정상적인 기업경영 토대 구축 △

건설산업의 구조 혁신 △건설수요 창출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상생 경영 △사회공헌 확대 및 건설기업 지위 향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내실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도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 회원 표창과 유관기관 유공 인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하도급·장비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9월 첫 공개

국토부, 종합1곳-전문9곳 소명대상 선정

하도급·장비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 명단이 오는 9월 처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위원장 겸 김경환 1차관을 열고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하도급대금 등을 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의 해당 업체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명 대상자는 오는 5~8월까지 3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공개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들 10개사의 체불액은 총 245억8000

만원이다.

장비대금이 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등이다.

10개사는 범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태인 중소 규모 종합건설사나 한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건설업체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는 2014년 11월15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이 처음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시정

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의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근로기준법상의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기준을 따랐다. 최근 1년여간 2회 이상 체불업자는 40여개사지만 3000만원 미만인 대부분이어서 소명 대상자가 10개사로 줄었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이름과 나이, 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 조사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종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또 시공능력 평가 때 3년간 공사실적 평가액의 2%가 삭감된다.

다만 소명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소명을 전제로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외에도 다양한 체불 해소 대책을 추진해왔다.

체불 우려가 높은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공기업에 '별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2개월 이내)나 과징금(4000만원 이내)을 물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체불 근절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체불자 명단 공표는 기존 대책보다 과공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영기자 kth@

건설사·유관단체·일반인 등 1만여명 참석 '축제의 장'

봄을 재촉하는 건설인의 합성과 힘찬 발걸음이 상암벌을 뒤덮었다.

제7회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가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건설경제> 신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엔 건설사와 건설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등 1만여명이 참가했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4.5km 걷기와 5km, 10km, 하프 코스로 이뤄진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안전사고 없이 마라톤을 즐겼다. 이후 각사별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땀 흘리며 수고한 선후배·가족들의 어깨를 감싸며 동료애를 확인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과 경품 지급, OX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펼쳐졌다.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는 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 중 최대 규모인 데다, 일반 시민들까지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주요 인사들이 함께 걷고 뛰며 축제를 즐겼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송석준 국회의원 당선인,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김기석 기계설비공제조합 이사장, 전기호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정순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윤학수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최삼규 건단련 회장.

주최자인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건설경제 발행인)은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는 건설인들과 그들이 봉사하는 일반 시민이 서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며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희망을 갖고 이겨내다 보면 결승선이 보이는 마라톤처럼 반가운 미래가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하프 마라톤 코스에서는 데이브 피터(28)씨와 이정숙(50)씨가 각각 남녀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최다 참가단체는 △GS건설(805명) △건설공제조합(576명) △대한건설협회(370명) △대우건설(325명) △현대건설(321명) △대림산업(240명) △전문건설공제조합(162명) 순이었다.

한상준기자 newspia@

사진=안윤수기자 ays77@